

올림픽 공사 참여 못 해 경영 악화일로

(3)건설 전망 어둡다

상반기 건설수주량 급감
수도권 대형업체에 뺏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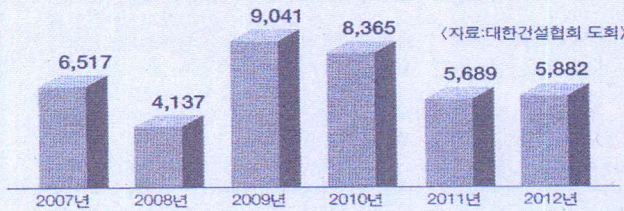
하반기 전년대비 8% 감소
올림픽 참여 박탈 큰 타격
공공공사 급감 총체적 위기

도내 상반기 건설경기는 글로벌 경제위기, 공공 및 민간공사 발주물량 감소, 대형공사 내 지역업체 참여 제한 등으로 수주량이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지속됐다.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과 주택건설경기 둔화에 따라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상반기 건설수주 급감=1일 강원건설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일반건설 총 발주금액은 5,882억원으로 3년 전인 2009년 9,041억원에 비해 35%나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93억원이 증가

긴급진단 위기의 세계경제, 불안한 강원경제

도내 일반건설 연도별 상반기 발주금액(단위:억원)



했지만 이는 지난해 공공공사 물량이 급감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3조 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입찰이 이뤄지며 소폭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전문건설 및 설비건설업체의 발주금액과 수주량도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량 등이 감소한 것은 건설·주택경기 침체와 공공 및 민간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의 SOC사업 예산은 22조여원으로 전년에 비해 5.5% 줄었

으며 4대강사업 완료로 수자원 부문 투자금액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공사의 경우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은 단독입찰이 불가능해 전체 지분율은 5~10%에 불과한데다 서울 및 수도권 대형 건설사의 도내 진출이 늘어나 수주량이 줄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반기 건설경기전망도 암울=도내 건설업계는 하반기 수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는 발주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2년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수주 위축, 지방 주택건설경기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계올림픽 자원특별법 내 지역업체 우대방안 포함이 어려워지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올림픽 관련 대형공사에도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공사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중·대형 공사에는 지역업체 참여 폭이 제한돼 있어 도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며 지역업체의 숙원인 동계올림픽 참여 확대도 사실상 물거품되며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위운기자 faw4939@kwnews.co.kr

“산적인 도 현안 찰떡 공조로 해결”

민주통합당 도당 최문순 도정 오늘 당정협의회 개최

올림픽특별법·소규모학교통폐합·대형마트규제 등 논의

민주통합당 도당과 최문순 도정이 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도당과 도는 2일 오전10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8월 당정협의회 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7월 당정협의회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와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선정한 정치 및 정책적 주요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내실화 논의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도당은 최근 논의되는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도 자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고려해 도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 육성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골목상권 보

호를 위한 방안과 중증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달 첫 당정협의회에서는 도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 채택과 함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민주당 정책을 도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당 관계자는 “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없이 있다는 점에서 도당과 도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도를 이끌고 있는 만큼 도당도 도정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도내 현안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특별법 시행령 내실화취다”

올림픽특위 오늘 국회 방문

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오세봉)는 2일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내실 있는 동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건의한다.

오세봉 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시행령 제정 시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위임된 대회 관련시설 및 특구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강릉, 평창, 정선 등 3개 시·군 특위 위원장도 함께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2012.8.2(목) 강원도민일보】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도 요구 사항 관철 나섰다

도의회 특위, 국회·중앙정부 방문 지원 촉구

강원도의의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도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잇따라 방문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강릉시의회, 평창군의회, 정선군의회 등 올림픽 개최도시 3개 시·군의회 올림픽 특별 위원장들이 동행해 지역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강창희 국회

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례로 면담하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에 위임된 대회관련 시설 및 특구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올림픽 특별법 내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에 전달했다.

또 특별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폐회식장 등을 포함한 대회관련시설 지원 추가 명시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 시설 확충 △지역기업 우대 참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문광부에 보내는 등 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 왔다.

오세봉 동계지원특위 위원장은 "개최도시 시·군 의원들과 공조해 지역의 여론을 확실하게 전달해 중앙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2012.8.2(목) 강원도민일보】

강릉 아트센터 국비지원 못 받는다

정부 "동계올림픽 경기진행과 연관성 없다"... 특별법 시행령 관련조항 삭제

강릉시가 국비지원을 전제로 추진중인 '아트센터 건립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였던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아트센터' 등을 '대회여건 조성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했으나, 정부는 올림픽 경기진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트센터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비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강릉시도 당초 예상사업비가 671억원에 달하는 '아트센터'를 자력으로 건립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동계올림픽 대회여건 시설'과 연계해 아트센터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가 해당 시설

물은 당장 올림픽을 치르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올림픽이 끝난 후 건설하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깊은 고만에 빠졌다.

시는 강릉 아트센터가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문화기초시설 공연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조만간 확정·공포될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후 개정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문화계의 숙원사업인데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건립될 경우 문화·예향의 저력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는 당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교통 실내체육관 부지에 671억원을 들여 지하2층~지상

3층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완공이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가 1861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최근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했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